팩트체크의 실제와 한계



박국희 |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조선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
  이스라엘 단기 특파원
  쿠바 단기 특파원

지난 5월 9일 대선을 전후해 '팩트체크'(Fact Check)라는 생소한 단어가 보편화됐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상에서는 '팩트 폭력', '팩트 폭격' 같은 신조어까지 나왔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한다'는 정도의 뜻으로 유행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만들어 낸 신풍경이다.

60일간의 대선, 팩트체크 열풍

제19대 대선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궐위 선거로 치러졌다. 3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이후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했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정치 이벤트가 진행돼 왔던 정치권의 통상적인 대선 일정이 어쩔 수 없이 두 달로 압축돼야 했다는 뜻이다. 실제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대선 행보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대선이라는 한국 최대 정치 이벤트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다보니 정치권은 바빠졌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빠듯했다. 민주당은 4월 3일에서야 문재인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5월 9일 대선 투표일을 고려하면 정작 본선을 치를 시간은 한 달 남짓이었다.

한 달의 승부가 5년을 갈랐다.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당연히 '한 방'을 기대했다. 은연중에 정치권 '선수'들의 뇌리에 '아니면 말고', '모 아니면 도' 의식이 똬리를 틀었다. '묻지 마 폭로'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각종 의혹을 질러 놓으면 여론은 금세 반응했고, 시시비비(是是非非)가 가려지기도 전에 이미 한 달짜리 본선은 끝나 있을 터였다. 어차피 정권만 잡으면 책임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때마침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가짜 뉴스'(fake news) 열풍도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국내 언론계에 사실상 처음으로 등장한 '팩트체크'는 이러한 조기 대선 특수성에서 기인했다. 과거 언론 매체들은 대선 후보나 정당의 '네거티브' 공방을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대선 기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양쪽 공방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거짓과 사실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60일 이내의 조기 대선, 한 달 남짓의 본선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언론도 유권자도 사실 확인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다.

정치부가 중심 … 필요하면 전 부서가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고 5·9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인 3월 20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팩트체크' 코너를 지면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3월 24일부터는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쟁점의 사실 여부를 진단하는 '팩트체크' 전용 사이트(factcheck.chosun.com)를 오픈했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권의 주장과 루머 중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고 검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매일 1건 이상 엄선해 다룬다는 목표였

다. 지면에 나간 기사가 그대로 실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면에 미처 싣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는 확장판인 경우가 많았다. 지면 기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사실', '일부만 사실', '사실 아님', '판정 보류', '말바꿈' 등으로 분류한 것도 큰 차이점이었다.

'대선 팩트체크'는 편집국 차원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주축은 정치권 공방의 주(主) 무대인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정당팀이 맡았다. 하지만 이슈에 따라 복지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경우 각각 사회정책부와 경제부가, 법적 측면에서 논란이 될 경우 법원·검찰을 담당하는 사회부 인력이 투입돼 협력하는 시스템이었다. 정치부 기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여타 부서에서 별도의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선 팩트체크'는 지면에 실린 기사를 기준으로 대선 기간 총 13건 작성됐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관련이 4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관련이 각각 2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TV토론 관련이 1건, 국방·북한·정권별 소득불평등 지수 등 일반 정책 관련 기사가 3건이었다.

1등 후보에 몰리는 팩트체크

'팩트체크' 후보는 각 부서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을 추천해 올리면 편집국 회의에서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정당팀 기자들이 매일매일 '팩트체크' 후보군을 발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마크맨' 기자들이 현안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거나 시시비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만한 이슈들을 선별해 '팩트체크' 후보로 올렸다.

문제는 유력 후보를 둘러싼 '팩트체크' 사안이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율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팩트체크' 사안이 집중됐다. 전통적인 대선 보도에서 언론은

기계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왔다. 지지율 40% 후보와 4% 후보의 동정은 거의 비슷한 빈도와 분량으로 다뤄진다. 방송 뉴스의 경우 카메라에 후보 얼굴이 비치는 시간과 각도, 리포트의 길이까지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팩트체크'의 경우 이러한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의 경우 그에 상응해 논란이 되는 이슈도 적게 마련이다. 언론이 이를 억지로 만들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관심 역시 아무래도 1위 후보에 쏠리게 마련이다.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네거티브 공방을 시작하는 쪽은 대부분 후발 주자들이었고, 지지율 1위 후보는 이를 오롯이 감내해야 했다.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 등에 '팩트체크' 기사가 집중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후보만 겨냥해 '팩트체크' 기사를 다뤘다"는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기계적 중립성을 맞추기 위해 유권자가 딱히 궁금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뤄지지 않는 사안을 굳이 '팩트체크' 기사로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선 기간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오히려 '팩트체크' 기사를 그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취재에 적극 응대하며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판단에 대한 부담과 한계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부담감도 크게 느꼈다. 관찰자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전달하기만 했던 기존 경우와는 달리, 기자 신분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판단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소 수동적으로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을 기계적 중립

을 잣대로 보도하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언론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실이다', '거짓이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깊은 취재와 사실 확인 과정을 요구했다. 부담도 클 수밖에 없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언론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또 다른 문제였다. 3월 28일자 조선일보 '대선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문재인 아들 채용 의혹…MB정부 때 감사 통해 특혜 없었다고 확인?' 기사를 실었다. 지난 대선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의혹을 다룬 '팩트체크' 기사였다.

문 후보 측은 MB정부에서 감사를 벌였지만 드러난 게 없어 특혜 의혹은 거짓이라는 입장이었고, MB정부 당시의 감사는 문 후보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반대 측 입장이 제기됐다. 당시 관련자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팩트체크'는 사실 지엽적 부분에 대한 제한적 검증에 그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는 대선이 모두 끝난 후에야 몇몇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 끝에 내려진 결론이 아닌 이상, 하루 이틀 이내에 취재를 하고 매일 발생하는 이슈를 따라 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 사안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한적 자료만 남은 상황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조선일보가 4월 15일에 보도한 '문재인·홍준표 TV토론서 노무현 640만 달러 뇌물 의혹 나왔는데…' 기사 역시 마찬가지 경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자살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사실상 수면 아래 묻힌 상황에서 이제와 언론이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거짓 여부를 최종 결론 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만 나열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같은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사마다 정파성을 토대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팩트체크의 다양한 가능성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팩트체크' 시도는 여러모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 덕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도중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논란의 발언에 대해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팩트체크'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각 대선 캠프에서도 단순히 방송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방어 내지는 공격을 위한 '팩트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각 후보 측에서는 상대방 후보의 잘못된 발언이나 지적이 들어올 경우 생방송 도중에도 재빠르게 담당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정정하거나 과거의 통계나 자료를 인용해 '팩트체크' 형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 매체 역시 과거 TV토론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TV토론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팩트체크'로 되짚어 보는 시도를 하게 됐다.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시시비비가 실시간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는 '진흙탕 공방'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TV토론이나 유세 과정에서 "이 사안은 언론이 팩트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팩트체크' 형식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적 네거티브 공방 분야가 아닌 국민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공약 부분이 아닐까 싶다. 각 후보들마다 장밋빛 공약을 발표하고 의도적으로 재원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다 심층적인 '팩트체크' 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4월 19일 보도했던 '安,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전교조 합법화 공약?' 같은 '팩트체크' 기사는 잘못된 최초 보도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거짓이 사실로 둔갑한 경우였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관련 공약을 발표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안 후보나 유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됐던 '팩트체크'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으려면

사실 '팩트체크'와 비슷한 언론의 시도가 과거 대선에서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대선 당시 터져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 같은 경우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 취재를 했고, 나름대로 사안의 본질을 여러 각도에서 들춰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팩트체크'라는 간판만 내걸지 않았을 뿐 실제 기사의 취지와 내용은 이번 대선 때 나온 여러 '팩트체크' 기사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터져 나온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에 대한 국민의당 측의 제보 조작 고백이었다. 대선 며칠 전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어느 언론도 '팩트체크'를 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사건이지만 결국 몇 달 후 정치적 후유증을 크게 남기게 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언론사가 없었을 수

있고, 막상 취재에 들어갔어도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언론 입장에서 제보 조작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대선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킬'했을 가능성도 크다. '팩트체크'가 본격화 됐던 5·9 대선이었지만 결정적인 과제 또한 남긴 셈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만 스타일리시한 '팩트체크'를 해놓고 자위하고 있던 건 아닌지 모든 언론이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